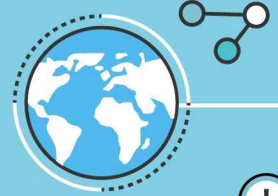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가스·제재, EU·미국·러시아】 러시아,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세부내용 발표

【원유·제재, EU·러시아】 EU의 對러 6차 제재(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합의 난항

【가스, EU·러시아】 EU, 달러·유로화 지급에 한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매입 허용

【안보, 핀란드·스웨덴】 핀란드·스웨덴, 나토(NATO) 가입 공식 결정 → 5.18일 가입 신청 예정

【제재, 미국·러시아】 美 상무부,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 박탈 관련 검토 착수

【경제·통상, 미국·아세안】 바이든 정부, 동남아 지역에 1억 5천만 달러 투자 계획 발표

【코로나·경제, 중국】 중국, 코로나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4월 주요 경제지표 일제히 하락

【망간, 중국】 中 망간협회, 회원기업에 50% 감산 요청

【밀, 인도】 인도, 밀 수출 중단 조치 발표

【경제·공급망, 일본】 일본 경제안전보장법, 국회 최종 통과하여 '23년 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GVC 뉴스 더하기

- ① 국내 경유 평균가격, 14년만에 휘발유 추월
- ②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점검
- ③ EU 공급망 실사지침(안) 주요 내용과 기업 사례



GVC 기초상식

'○○○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의 형제들



GVC 돌보기

'팜유'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



GVC 전문가

IMF - '공급망은 리쇼어링이 아닌 다변화가 필요하다'



GVC 소식통

- ① 라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러시아 제재 전망과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더 알아보기

'러시아 제재의 역설' (그래픽)

최신 GVC 해외 이슈

● **[가스·제재, EU·미국·러시아] 러시아,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세부내용 발표**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5.12일 러시아가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제재 대상 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5.13일)
 - (적용기간) '22.5.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 (제재대상) 독일,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 (한국 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 (조치내용) 러시아 정부 및 관할 하의 조직·개인은 제재 대상과 거래금지 및 수출금지
-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가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2.5.13)

● **[원유·제재, EU·러시아] EU의 對러 6차 제재(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합의 난항**

- EU 집행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6개월 이내에,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은 금년 말까지 중단한다는 對러 6차 제재안을 마련하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24년 말까지, 체코는 '24년 6월까지 수입 중단을 유예하는 예외 방안을 마련했지만,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의 반대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
- 헝가리 외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서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경우, 그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데 약 150~180억 유로(20~24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 특히, 헝가리는 최소 5년의 유예와 크로아티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할 때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8억 유로(약 1조원)의 지원을 요구함. 헝가리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고 내륙국가인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위한 터미널 건설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대고 있음

출처 :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서울신문

● **[가스, EU·러시아] EU, 달러·유로화 지급에 한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매입 허용**

- EU 집행위는 EU 기업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매입과 관련하여 유로화 혹은 달러화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 EU의 제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하였음. 또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러시아 가스프롬뱅크 특별외화계좌(달러·유로화로 송금 가능) 개설도 막지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우회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매입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만, 러시아가 요구하는 루블화 계좌 개설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 이번 조치는 사실상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에 일부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EU의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위협에 굴복해 제재를 완화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음

출처 : Bloomberg(22.5.16), 국제금융센터(22.5.17), 아시아경제

● **[안보, 핀란드·스웨덴] 핀란드·스웨덴, 나토(NATO) 가입 공식 결정 → 5.18일 가입 신청 예정**

- 핀란드(5.15일)·스웨덴(5.16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을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함. 양국은 1948년, 1949년부터 군사적 중립을 고수해왔으나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국 내 여론이 나토 가입으로 선화 → 5.18일 가입 신청 예정
- 이와 관련,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힘. 특히, 스웨덴에 대해 “테러 조직이 그 나라 의회에 있다”며 ‘테러 조직의 등지’라고 비판함. 에르도안

대통령이 거론한 '테러 조직'은 쿠르드노동자당(PKK)를 의미하며, PKK는 터키 동남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으로, 터키 정부는 PKK를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간주

- 나토 규정에 따르면 신규 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가능하며, 터키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음. 결국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권을 쟁 상황임
- 이와 관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을 조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들 국가에 나토의 군사 인프라이가 배치되면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

출처 : 연합뉴스·한국경제(22.5.17), 터키 아나톨루 통신

● **【제재, 미국·러시아】 美 상무부,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 박탈 관련 검토 착수**

- 미국 상무부는 러·우 사태 관련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Market Economy Status)에 대한 '상황변동 심사(Changed Circumstances Review)'를 예고함
- '21년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무역구제 관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나, 검토 결과 러시아를 '비시장경제국(NME)'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임
- 비시장경제국(NME)으로 지정되면 미국 상무부는 총 6개 부문을 통해 러시아의 시장경제 적합성을 판단하고 강화된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됨
 - (6개 부문) △타국과의 통화 태환성, △노사 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 △합작벤처(JV)의 투자 허용, △정부의 규제 정도, △정부의 자원 분배 및 통제 수준, △조사 당국의 적절성 등

출처 : 상무부 보도자료(5.10)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경제·통상, 미국·아세안】 美 바이든 정부, 동남아 지역에 1억 5천만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美 바이든 정부가 5.12~13일 양일 동안 개최한 '특별 아세안정상회의'에 전체 10개 회원국 중 필리핀, 미얀마 제외 8개국* 정상 참가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바이든 대통령은 '미-아세안 안보·번영·인권 등 협력'의 제목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에너지 인프라, 불법 조업 대응, 디지털 경제 협력 등을 위한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
 - 에너지 인프라(4천만 달러), 불법조업(6천만), 방역(1.5천만), 디지털 경제(0.4천만) 등
- 투자 계획이 바이든 정부가 구상 중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중점 이슈와 일치하여, 언론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IPEF 참여가 주요 의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언론은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IPEF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도 해석

출처 : 백악관 팩트시트(5.12), 블룸버그(5.1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코로나·경제, 중국】 중국, 코로나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4월 주요 경제지표 일제히 하락**

-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이에 따른 봉쇄조치로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추락, 특히 4월 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1.1% 큰 폭으로 감소함. 이 중 상품 소매판매는 9.7% 줄어들었으며, 특히, 외식 매출은 22.7%나 하락함
 - 중국 4월 주요 경제지표 : 산업생산 2.9% ↓, 소매판매 11.1% ↓, 투자 6.8% ↑, 서비스업생산지수 0.9% ↓, 수출 3.9% ↑, 수입 0%, 실업률 6.1%(20.2월 6.2% 이후 최고치)
- 4월 공업기업의 생산도 2.9% 감소함. 이 중 제조업은 4.6% 줄어들었으며, 특히, 자동차 부문 제조업의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1.8%나 하락함
 - 중국의 4월 자동차 생산량은 120.5만대로 전년동월대비 46.1%, 판매량은 118.1만대로 전년동월대비 47.6% 급감함. 1~4월 누계로는 자동차 생산량은 769.0만대(10.5% ↓), 판매량은 769.1만대(12.1% ↓)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등

● 【망간, 중국】 中 망간협회, 회원기업에 50% 감산 요청

- 5.12일 중국합금철공업협회 망간전문위원회는 40개 회원 기업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감산을 통해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할 것을 요청
- 망간합금 시장 수요 위축, 위안화 약세, 광물 수입가격·코크스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진단
- 생산 가동률을 50% 이내로 엄격 통제하고 매월 해외 망간 광석 구매량을 120만 톤 줄여 공급과잉을 완화할 것을 요구
 - 40개社의 망간합금 생산능력 합계는 120만 톤/월, 50% 감산 시 매월 생산물량을 60만 톤 줄일 수 있음

출처 : 證券時報(5.12)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밀, 인도】 인도, 밀 수출 중단 조치 발표

- 인도 대외무역국은 5.13일 밀 수출 중단 조치를 발표함.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국가 기준)의 밀 생산국이나 대부분이 내수로 소비되어 수출 비중은 전 세계 수출의 4%에 불과
 - 인도는 108.5백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출은 8.5백만톤에 불과 (수출 순위 : 세계 8위)
- 우리나라는 '20년 기준으로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연간 334만 톤의 밀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 제분용은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전량 수입 중이며, 사료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
-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 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 → 장기화될 경우, 국제 밀 수급·가격 예의 주시 필요
 - 국내 업계는 제분용 밀은 8월초(계약물량 포함시 10월말), 사료용 밀은 10월초(계약물량 포함시 내년 1월말)까지 물량을 보유 중 → 정부도 만약 가격이 오른다면 가격 인상분의 70%는 정부, 20%는 업계,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정부 추경안에 밀가루 가격안정 사업 등을 반영)

출처 : 농림수산물부 보도참고자료(5.15), 언론보도 등 종합

● 【경제·공급망, 일본】 일본 경제안전보장법, 국회 최종 통과하여 '23년 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기시다 정권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제안전보장법안이 4.7일 중의원 본회의에 이어 5.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 5월 내 법률을 공포하고 '23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임
-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정성 확보, △첨단기술 민-관 협력, △특허 비공개 등이 핵심 내용
 - (공급망 강화) 시행 공포 후 9개월 이내 시행 예정 / 반도체, 의약품, 희토류, 배터리 등 국민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요 물자를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 공급망 확보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여 정부가 인정한 사업자에 대해 재정 지원
 - (인프라 안정성 확보) 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9개월 이내 시행 예정 / 전기, 가스, 석유 등 14개 인프라 분야의 사업자가 중요 설비의 도입 또는 유지·관리 위탁 시 정부의 사전 심사 의무화
 - (첨단기술 민-관 협력) 시행 공포 후 9개월 이내 시행 예정 / 첨단 분야의 중요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성과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 책정 및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 통한 정보 공유, 싱크탱크를 통한 조사연구위탁 등
 - (특허 비공개) 시행 공포 후 2년 이내 시행 예정 / 특허 공개 시 국가의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술의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의 공개 절차 유보를 통한 정보유출 방지 제도를 정비
- 특정 중요물자, 기간 인프라 사전심사의 대상 기업·설비 등 138개 주요 세부사항이 국회 심의가 불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추후 결정될 예정인 바, 야당은 정부의 자의적인 운영 가능성을 우려
- 또한 일본 주요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율성 저하 및 중국과의 관계 저해를 우려하고 있음
 - 경제 안전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창출하는 시장주의의 강점을 상실할 우려(기우치 다카히, NRI, 5.11일)
 - 일·중 간 '21년 무역액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안전보장을 위한 중국 배제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우려(이소야마 토모유키, 마츠-現代, 4.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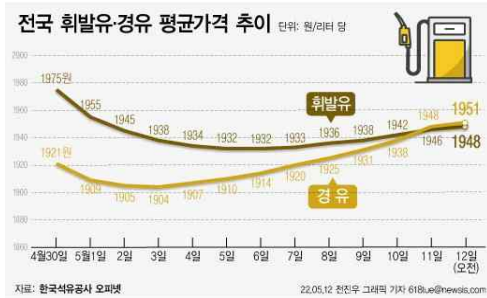
출처 : 아사히신문, 일본경제신문 등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일본 경제안전보장법 상세내용 : '인사이트' 8호 참조)



GVC 뉴스 더하기 ① : 국내 경유 평균가격, 14년만에 휘발유 추월

※ '08년 5~6월 약 3주간('08.5.29 ~ '08.6.18)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바 있음. 당시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유 수요가 급증하여 역전 현상이 발생함. 최근(22.5.11) 14년만에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함. 이러한 **경유 가격의 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자

● 14년만에 국내 경유 평균가격이 휘발유 평균가격을 추월(22.5.11)



-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1947.95원/L)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1946.27원/L)보다 1.68원 더 높게 집계됨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5.11일 오후 7시 기준)
- 유럽연합(EU)은 수입 경유의 약 6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데,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유 가격이 치솟음

↳ 역전 현상 발생원인 I

● 국제시장에서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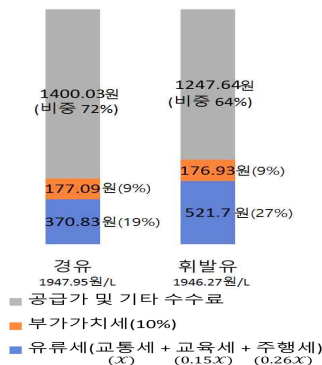
- 유럽은 디젤차 비중이 높아 여전히 경유 수요 높음
-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경유 가격은 대체로 휘발유 가격보다 높음**



●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구성

- 국제 시장에서의 '경유 > 휘발유'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세금 부과**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 가격은 '경유 < 휘발유' 현상**이 나타남

<'22.5.11.기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구성>

- 휘발유·경유가격 = ① 유류세 + ② 부가가치세 + ③ 공급가 및 기타 수수료
- ① 유류세 = 교통세(x) + 교육세($0.15x$) + 주행세($0.26x$)
 - * 교육세 = 교통세(x) × 0.15 = 0.15x
 - ** 주행세 = 교통세(x) × 0.26 = 0.26x
- 경유일 경우 $x = 263$, 휘발유일 경우 $x = 370$ (유류세 30% 인하시)
- ② 부가가치세 = [① 유류세 + ③ 공급가 및 기타 수수료] × 10%
- ③ 공급가 및 기타 수수료는 정유사·주유소 마진과 관련된 부분

●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20 → 30%) → 역전 현상 발생원인 II

- 정부는 '22.5~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여 휘발유(83원/L)와 경유(58원/L)가 추가적으로 할인되었고, **휘발유의 할인폭이 더 커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더 싸짐**

※ (생각해보기) 버스·화물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분야에서 경유가 많이 사용됨. 일반화물 운전자의 평균 지출 중 유류비 비중이 42.7%인 상황에서의 경유 가격 상승은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글로벌 공급망은 서민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정부는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기준가격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급)** 지급 기준가격 1850→1750원 인하, 지급기간 7월→9월 연장 결정(22.5.17)하였으며, '22.6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중



GVC 뉴스 더하기 ② :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점검

※ 최근 원자재 수급난과 가격 상승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실제 원자재 가격상승은 생산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최근(5.16) 공정위는 표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앞으로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상승 속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임

● 조사 결과

- **(계약서 반영 실태)**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각각 21.4%, 11.5%)로 조사됨
 -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도 6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항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함
 -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함. 이 중 조합을 통해 대항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는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됨
 -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48.2%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남 (조합을 통해 대항협상을 신청한 경우 협의 개시 비율이 69.3%로 높게 나타남)
- **(단가 조정)**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
 -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부반영(6.2%)을 포함하여 50% 이상(12.2%), 10% 이상(20.7%), 10% 미만(24.7%)
 -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남
 - * 단가 반영은 수급사업자의 조정요청,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자동반영 등으로 진행

●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

1] 전담대응팀 가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 ①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
- ② 5월말부터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
 -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배포(22.5.20) 계획
- ③ 이번 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우수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
- ④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22.4.12 설치)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
 - * 원사업자 1만개, 수급 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 대상
- ⑤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8월)**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4~9월)**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

2] 납품단가 조정 대항협상 활성화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

* 개별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항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건·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22.5.16)

☞ **(생각해보기)**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상승은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 → **협력·분담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초래**


GVC 뉴스 더하기 ③ : EU 공급망 실사지침(안) 주요 내용과 기업 사례

※ EU는 지난 2월 기업의 전체 공급망에서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담은 'EU 공급망실사지침(안)'을 발표함. 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과 기업의 대응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참고할 부분들을 점검해보자.

- **법안 개요** (※ 법안 세부내용은 '인사이트' 2호 : 'EU 공급망 실사 지침 분석' 참고)
 - **[명칭]** EU 공급망 실사지침(안)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적용 대상]**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EU 기업과 제3국 기업 중 고용인원/매출액/산업군 기준 충족 기업
 - EU 기업 13,000여 개(전체 EU 기업의 약 1%에 해당), 제3국 기업 4,000여 개에 적용될 것으로 추산
 - **[적용 범위]**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까지 포괄적으로 적용
 - **[적용 시기]**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후, 중견기업은 지침 발효 4년 후부터 적용
 - **[적용 의무사항]** 인권·환경에 대한 내부 정책 수립, 영향파악·예방·대응·불만 접수 이행사항 공개 등
 - **[의무 위반 시 제재]** 금전적·행정적 제재 조치를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
 - 특정 행위 중단 명령, 임시조치 명령, 금전적 제재(벌금)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시 제재 규모는 기업 매출액에 비례
 - **[향후 절차]** EU 의회 및 이사회가 최종 문안에 합의하여 동 법안을 공식 채택한 이후 지침 발효
 -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전환 후 시행
- **공급망실사 관련 EU 기업 분쟁사례**
 - 현재 프랑스(인권·환경), 독일(인권·환경), 네덜란드(아동노동) 3개국이 개별 국내법으로 공급망 실사법안을 채택
 - 발효일시(예정): 프랑스(2017년)/ 네덜란드(2022년)/ 독일(2023년)

국가	기업명	분쟁 사유	세부 분쟁 내용
프랑스	Total (에너지)	지역사회 환경 및 인권 위험 초래로 인한 법적 의무 불이행	- [사건 개요] 2019년 프랑스 및 우간다의 인권 및 환경보호 단체는 Total사에 프랑스 기업실사 의무법의 인권 및 환경보호 법적의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 제기 - [제기된 위반 혐의] Total사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 인권 및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 [소송 진행 및 결과] 기업실사 의무 관련 청구 심리 관할권에 대한 분쟁으로 판결 지연 * 프랑스 의회는 향후 동법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진행키로 결정
프랑스	EDF (에너지)	지역사회 인권, 재산권 위험 초래로 인한 법적 의무 불이행	- [사건개요] 2020년 멕시코 및 유럽의 인권보호 단체는 EDF에 대해 기업실사 의무법의 인권 보호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 제기했으며 발전소의 즉각 운영 중단을 요구 - [제기된 위반 혐의] EDF는 지역사회와 논의 과정에서 개입과 억압 등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인권위협 - [소송 진행 및 결과] 파리 지방법원은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해당 지역의 EDF 풍력단지 운영 중단 요구 소송을 기각
프랑스	Suez (수자원)	수자원 오염사고 대응 미비로 지역사회 인권, 환경 위험 유발	- [사건개요] 2021년 국제, 프랑스 및 칠레의 인권보호 단체는 7일 Suez 자회사인 ESSAL에 대해 기업실사 의무법의 인권 보호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 제기. Suez가 칠레 수자원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간접 운영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기업실사 의무계획 공개할 것을 요구 - [제기된 위반 혐의] ESSAL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Caipulli 식수원에 원유가 유출돼 10일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되어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건강에 위험 초래. 인근 강에도 원유가 유출돼 환경피해 유발 - [소송 진행 및 결과] Suez는 ESSAL의 지분을 전량 매각. 하지만 인권 단체는 매각 후에도 Suez 대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고수

● EU 기업 공급망 실사 대응사례

국가	기업명	대응주제	주요 내용
덴마크	Lundbeck, Akon (제약)	다운스트림 인권 위험관리	- 난치성 간질 치료제와 마취제 용도의 펜토바비탈 성분 의약품 '넴부탈' 제조·판매 기업인 Lundbeck은 제품 사용 목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 제한 결정 - 2011년 미국 교정 당국이 룬드벡의 넴부탈을 사형집행에 사용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되자, 넴부탈이 형무소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통 계획을 조정
독일	BASF (화학)	기업 공급망 활동의 영향을 금전 가치로 환산	- BASF는 자사 및 직·간접 공급사 활동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Value-to-Society' 모델을 개발 - 'Value-to-Society' 모델은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약속 이행과 관련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할 수 있음
스위스	Nestle (음식료)	인권단체와 협력해 인권침해 예방	- 덴마크 인권단체(DIHR)와 혁신 파트너십을 체결(10년), 인권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 프로그램을 개발 - 컨설팅 업체의 인권 영향평가보고서를 참고해 공급망 내 잠재 인권 위험 파악 및 개선 노력
스웨덴	Vattenfall (화학)	행동강령 준수 서약 요구 및 불이행 시 거래 배제	- 환경·인권 보호 의무 준수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 및 실행 -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으로 ▲공급망 전반 실사 강화, ▲직·간접 공급사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이를 자사 행동강령에 반영 - 정책 미수용 기업 거래 제외 및 기후목표 제시 등 관련 노력 지속
스웨덴	H&M (의류)	공급망 위험요소 공개 및 추적 기능 강화	- 업계 최초 모든 의류 공급자의 정보 제공, 공급사 등급별 기준 마련 및 분류 실행 - 판매하는 모든 의류에 대한 공급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망 내 위험요소를 공개, 산재한 공급망 내 상품 이력 추적 가능성 강화
영국	M&S (유통)	공급망 매핑 데이터 제공	- 전 세계에 얽힌 복잡한 공급망 매핑(mapping) 데이터 제공 - 상품 형태, 주소, 노동자의 남녀성비, 조합 여부 등 직접공급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자사가 검증한 정보를 제공 [M&S 인터랙티브 맵] 

●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방안

- (실사 의무 분석 및 사내정책 내재화) 공급망 실사, 정보공개 등 의무사항을 검토하고 사내정책 반영 및 이행
- (회원국별 실사 의무 분석) 회원국별 실사의무와 감독기구의 제재 강도 파악 및 의사소통 채널 확보
- (비영리기구의 공급망 실사 관련 동향 주목) 환경·인권·지역사회 단체가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 미이행 소송의 주체이므로 이들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
-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고려한 사전준비)
 - EU의 높은 인권·환경기준 충족 여부가 협력사 선정 기준이 될 것이므로, 실사지침 준수가 어려운 중국, 아프리카, 남미 등의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우리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경우 특히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EU의 공급망에 진출하는 기회 요소로 작용 가능



GVC 기초 상식 : '○○○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의 형제들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하여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요 급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코로나 대응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망 경색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남. 아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자

● 기초적인 인플레이션 용어 -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용어	정의	원인
인플레이션	• 통화량의 증가(양적완화 등)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	• 유통되는 통화량의 증가 →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 • 소비자 투자, 재정지출 등 수요 확대 → 경제 부양 효과
디플레이션	• 통화량의 감소(테이퍼링 등)로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내려가는 경제 현상	• 의도적인 정책 (긴축 재정, 공개시장 운영, 재할인을 인상 등) →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물가는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상태가 나타나는 일은 드뭄 • 공급 증가(과잉생산 등)와 수요 감소로 인한 불황

● 특수한 형태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용어 - '스태그플레이션', '초(Hyper)인플레이션', '슬로플레이션'

용어	정의	원인
스태그플레이션	• 스태그네이션 + 인플레이션 (stagnation) (inflation) • 물가상승과 실직 및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제 상황을 의미함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을 완화시키려면 경기가 후퇴하고 경기를 부흥시키려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어려움 ☞ 실제 역사적 사례로 1970년대 중동 국가의 석유자원 무기화 → 석유 공급의 인위적 감소 → 원유 공급가격이 급등 → 인플레이션 발생 → 경제 침체 →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
초(Hyper)인플레이션	• 물가상승이 통제범위를 벗어난 상태로써 1개월당 50% 이상의 물가상승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의미함	• 전쟁이나 경제 불안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화폐주조세 등을 얻기 위한 계속된 화폐 발행 으로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할 때 나타남
슬로(slow)플레이션	•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함	• 더딘 경제성장 상황 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 2022년 경제상황은 1970년대 석유파동기의 스태그플레이션 때에 비해 경기 침체 정도가 약해서, '슬로플레이션'이라 부름

● 특정 산업에서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합성어 - '애그플레이션', '카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용어	정의	원인
애그플레이션	• 농업 + 인플레이션 (agriculture) (inflation) • 곡물가격이 상승 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 지구온난화·기상 악화로 인한 농산물의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 육식 증가로 인한 가축 사료 수요의 증가 • 국제 유가 급등으로 곡물 생산, 유통 비용 증가 • 식량 수출금지 등 식량 자원화 경향
카플레이션	• 카 + 인플레이션 (car) (inflation) • 강판과 같은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초과 수요 등으로 자동차 가격이 치솟는 현상	• 러·우 전쟁과 중국 코로나 봉쇄 등 국제정세 악화 및 물류대란 → 차량용 소재·부품(강판, 배터리, 반도체 등)의 수급난 및 가격인상 • 작년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으로 인해 제작에서 납품까지의 시간(리드타임)이 증가 → 초과 수요 발생
그린플레이션	• 그린 + 인플레이션 (green) (inflation) • 친환경 경제로 전환할 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 이 발생하는 현상	• 전기차(니켈, 코발트, 망간), 경량화(알루미늄), 친환경 생산(희토류, 구리) 등 친환경으로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공급이 못 따라가면서 가격 상승 → 각종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물가상승(인플레이션) • 친환경 에너지(재생에너지, LNG 등) 발전이 늘고 석탄 발전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전력 가격 상승 → 경제 전반에 영향

GVC 돋보기 : '팜유'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유 및 원료 수출금지 조치(22.4.28) 시행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팜유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팜유 품목 개요 >

- ◇ 기름야자 열매를 착유하여 팜유 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및 껍질 등의 부산물 또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됨
- ◇ 팜유 원유를 정제(Refined)·표백(Bleached)·탈취(Deodorized)하면 RBD팜유가 되며, 다시 분획공정을 거쳐 고체 부분은 팜스테아린(주로 화장품용), 액체 부분은 팜올레인(주로 식품용)으로 분리됨
- ◇ ①세정·보습 성분의 화장품 원료용, ②식용유, 라면·과자 가공을 위한 식품용, ③바이오디젤(수송용) 및 바이오증유(발전용) 등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사용



- **(글로벌 생산·가격동향)**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84%를 인니와 말련이 과점하는 구조이며, 3대 식물성 식용유(대두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대체재인 팜유의 국제 가격도 상승

< 국가별 팜유 생산량(18) >

단위: 톤, %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파푸아뉴기니	에콰도르	기타	전세계
생산량	40.57	19.52	2.78	1.63	1.05	0.875	0.63	0.56	3.83	71.45
비중(%)	57%	27%	4%	2%	1%	1%	1%	1%	5%	100%

출처: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작년 말 대비 국제 팜유 가격 40% 상승 ('21.12) 1270.29 → ('22.3) 1779.96(\$/톤)
- 최대 공급자인 인도네시아의 ①내수시장 공급의무 비중 확대(20% → 30%), ②B30프로그램(바이오디젤 혼합비중 30%)으로 인한 팜유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국제 공급 감소
- **(인니의 수출금지 조치)** 자국 식용유 가격이 작년 초 수준(14,000루피아, 약 1,230원/ℓ)으로 하락할 때까지 팜원유, RBD팜유, RBD팜올레인, 폐식용유 등 인니 HS코드 기준 12개 품목의 수출 금지 조치 발표(4.28)
 - '22.1월부터 자국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제 팜유 가격 상승에 따라 인니 팜유 생산업체들의 수출에 치중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수출금지 정책을 발표
 - * 인니 국내 가격추이 : ('21.1월 초) 14,000루피아(약 1,230원) → ('22.4.28) 21,350루피아(약 1,870원), 65.6% ↑
 - 그간 인니 정부의 조치 경과 : (기존) 수출신고제 → ('22.1.24) 수출허가제 시행, 내수 공급 20% 의무 → ('22.3.10) 내수 공급 30%로 확대 → ('22.3.17) 내수공급 의무 폐지, 수출세 인상

● **(한국의 팜유 수입 현황)** 팜유(HSK 1511) 전체 수입은 연 60만톤 내외, 이 중 인니산 비중은 약 56%로 수출금지 품목(아래 표 음영) 중 팜원유·팜올레인 수입량은 미미

- 식품용이 약 24만톤, 비식품용(화장품, 세제, 바이오 연료용)이 약 36만톤으로, 식품용인 팜올레인(HSK 1511.90.1000) 수입액의 99.9%는 말련산이고, 인니산은 0.1% 불과(21년 65백만달러, 99.9%/TriBIG)
- 인니에서 주로 수입하는 RBD팜스테아린(화장품·세제용 등)은 금번 수출금지 조치 품목에 미해당

〈 2021년 팜유 수입 현황 〉

구분	HSK코드	2021년		인도네시아 (톤, 56.5%)	말레이시아 (톤, 43.5%)
		수입량(톤)	비중(%)		
[팜유 전체 수입 규모]	1511	605,437	100.0	341,801	263,636
팜원유	1511.10.0000	1	0.01	0	1
팜올레인(주로 식품용)	1511.90.1000	58,978	9.7	61	58,917
팜스테아린(화장품 등)	1511.90.2000	210,869	34.8	134,949	75,920
기타(RBD팜유 등)	1511.90.9000	335,589	55.4	206,791	128,798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국의 팜유 사용 현황)** 식품용 팜유(20년 약 24만톤)는 대부분 말련산을 사용하며, 바이오디젤 원료 팜유 부산물 등을 약 59.1% 수입

- (식품) 라면 가공용으로 67%, 식용유로 15%, 과자류로 8%, 기타 식품 생산에 10%를 사용(말련산 99.9%)
- (에너지) 바이오디젤 원료로 공업용의 RBD 팜유 및 RBD 팜올레인 13만톤을 인니에서 수입 (21년, 전체원료의 15%)

〈 국내 식품용 팜유 사용 비중 〉



출처: 2020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조사(21.4.농식품부)

〈 바이오디젤 원료 비중 〉

	수입 원료				국산 원료		
	식용 팜유	비식용 팜유	기타	소계(%)	폐식용유	기타	소계(%)
비중(%)	0.7	58.4	19.3	78.4	20.8	0.8	21.6

단위: %

● **(국내 영향 전망)** 인니의 팜유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업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화 시 국제 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 우려 → **“해외 동향과 업계 수급 모니터링 지속 필요”**

- (식품업계) 주로 말련산을 사용하고, 현재 주요 업체별로 약 2~4개월분의 재고를 보유 중에 있어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팜유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 존재
- (화장품업계) 인니의 수출금지 조치에 화장품 원료인 RBD팜스테아린이 제외되어 수급 영향은 없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팜유 원료의 공급부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
- (에너지업계) RBD 팜스테아린(비식품용)은 금번 수출금지 품목에 미포함, 동 품목(팜스테아린)으로 수출금지 품목인 RBD 팜유 등을 대체 가능하여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에는 영향 미미



GVC 전문가 : IMF - '공급망은 리쇼어링이 아닌 다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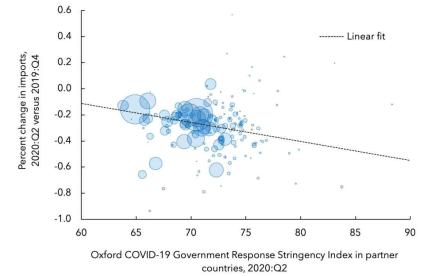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으로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IMF는 'Global Trade Needs More Supply Diversity, Not Less'(22.4.12) 보고서에서 리쇼어링을 통한 GVC 축소 보다는 다변화를 통한 공급망 탄력성 제고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소개함

● 코로나19는 국제무역 패턴, 더 나아가 GVC에 변화를 초래

- (1)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봉쇄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2020년 중 상품 수입이 당초 예상치를 상회했음
 - (2) 반면 봉쇄가 강력한 나라와 교역하는 국가의 경우 상품 수입이 크게 감소했음
- 이는 GVC로 각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무역패턴을 변화시켰음을 의미
 - 새로운 무역 패턴은 아직 단기이긴 하나 여러 산업에서 리쇼어링을 촉발시킴

Spillovers from lockdowns on imports

Lockdown policies of trading partners caused imports to fall.



Sources: Hale et al. (2021);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and IMF staff calculations.
Note: The Oxford Stringency Index is constructed taking 2018:Q3-2019:Q4 import flows as weights. The size of each country's bubble is proportional to the value of its imports (in USD) in 2019:Q4. The solid line is a linear fit of a weighted regression of the change in imports between 2020:Q2 and 2019:Q4 against the Oxford Stringency Index in partner countries, in which the weights are the values of imports (in US dollars) in 2019:Q4. The estimated coefficient is equal to -0.015 (t-stat =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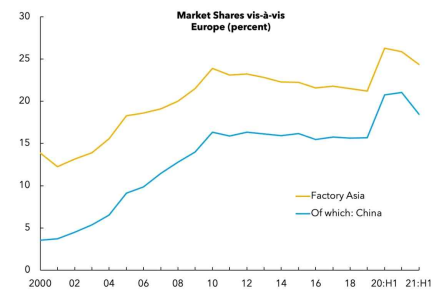
IMF

● World Economic Outlook (22.4월)에 따르면, 공급망 탄력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다변화된 가치사슬을 구축해 나가야 함

- 현재 세계 GVC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초 유럽이 이동 제한을 강화했을 당시, 유럽에서 아시아 제품이 공급부족인 유럽산을 대체하면서 아시아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
 - 그러나 1년 이내에 유럽산 재화의 점유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아시아산 점유율은 기존 추세로 회귀 (오른쪽 그래프 참조)
- 다만,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은 공급망 교란 지속으로 공급망 탄력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Shifting market shares

Asia's market share of global value chain-related products increased early in the pandemic but is dropping again, showing how global value chains continue to adjust.



Sources: Trade Data Monitor; and IMF staff calculations.

Note: Market shares are computed using only products and with respect to Factory Europe, as defined in the chapter.

IMF

● IMF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1) 여러 국가로의 공급선 다변화

-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GDP 감소 분석 결과, 단일 국가에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보다 공급망이 다각화되어 있는 경우의 GDP 감소폭이 절반 정도로 낮았음
- 공급선이 여러 국가에 걸쳐 다변화되어 있는 경우 평균적인 경제성장 변동성이 5% 더 낮음
- 다만, 코로나19 초기와 같이 대다수 국가에 큰 공급망 교란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2) 중간재 투입재의 대체 가능성(substitutability) 개선

- 중간재 투입 대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생산공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생산 방식 유연화, ② 부품 대체를 위한 국제 규격 통일 필요
- 실증분석 결과 핵심 중간재의 대체 가능성이 개선된 경우 GDP 감소율이 20% 낮게 나타남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안내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 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중견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 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 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 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 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관련 러시아 변호사 자문	
⑦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신규)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일시) 2022.5.20.(금) 10:00~11:30 *웨비나 접속 링크는 행사 당일 발송 및 공지 예정

시간	주제	발표자
10:00~10:10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협회 대응사업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10:10~10:50	러시아 제재 현황 및 전망	Gibson, Dunn & Crutcher LLP
10:50~11:10	한국정부의 러시아 제재현황 (금융제재 및 수출통제 중심)	김·장 법률사무소
11:00~11:30	Q&A	-

- (참가신청) 5.19일까지 [링크\(클릭\)](#)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02-6000-5617 / Jeff@kita.or.kr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정리](#) 종합전략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등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중국지역 긴급 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 지원 특별사업 (KOTRA)

- (지원대상) 중국 내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가비) 국고, 기업분담금 매칭 펀드로 100만원~1,000만원 지원
 - 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 VAT포함
- (사업 참가절차)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 사업명 : '물류' 검색 > 해당사업 클릭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개시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30, 7426

● [항공·해상운송] 로스앤젤레스 수출 중소기업 항공·해상운송 지원사업(한국무역협회·대한항공·밸류링크유)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및 전용 선박 마련을 통해 운송 지원(~22년 6월)

< 항공 - 항차 정보 >

도착지	출항지	출항일	신청마감일	선적 물량
Los Angeles, CA	부산	6월 14일(화)	6월 7일(화)	3FEU

< 해상 - 출항 정보 >

출항예정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 (상세내용) [대한항공 공동 "회원사 항공운송 지원사업"](#)(클릭) 또는 [물류 스타트업 "밸류링크유" 공동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02-6000-5754 / hjo117@kita.net

● 유럽·러시아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박 마련 → ① **운임 할인(10~15%)**, ② **선박 지원(항차별 30TEU 확정 지원)**, ③ **실시간 가격 조회 및 이력관리 제공**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社は 신청불가

☎ 기존대비 변경사항

- ▶ 도착지 확대: 유럽 전역 및 러시아
- ▶ 모집방식 변경: 상시모집

< 항차 정보 >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소요일	컨테이너	최종도착지	소요일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30일	40피트 (*20피트 불가)	유럽 전역	+2~3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45일	20피트		
		러시아 모스크바	40일	40피트	모스크바 인근 지역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 :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5935 / logistics01@kita.or.kr

더 찾아보기 : 러시아 제재의 역설 (그래픽)

침략에 대한 대가
러시아 경제 제재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최대 수입원인 원유 수출 불가능? 라트비안 블렌드로 상표 바꿔치기!

라트비아 항구에서 만들어진 러시아 원유 49.9% + 타국 원유 50.1% 비율의 '라트비안 블렌드'를 다국적 정유사들이 유럽 각국에 판매 중입니다. 러시아산 비율이 50% 미만이기때문에, 제재 받지 않으면서도 러시아는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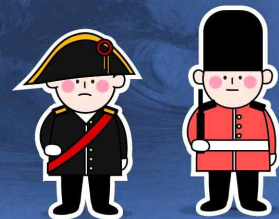
제재의 역설

- 국제 유가 폭등으로 올해 러시아 에너지 수출액은 작년대비 30% 이상 증가 전망
- 올해 1분기 러시아 경상수지 사상 최대 흑자 기록
-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 회복

역사 속에서도 제재를 역으로 이용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06년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 역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에 참패한 뒤, 영국의 무역을 막고자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무역업자 로스차일드 가문은 봉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덴마크 해안을 통하여 영국 내에서 헐값이 된 면직물의 대륙 밀수출에 성공, 큰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1차 세계대전 이후 170건의 경제 제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공한 경우는 4%에 불과합니다.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 효과 역시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통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분석센터’ 방문 및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개최 (‘22.4.29)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지역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현안 점검
 - 제조업 외에도 식량 등 연관 분야 공급망까지 확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는 방안, 업종별 협단체 외에도 종합상사 및 민간기업의 역량도 결집하여 대체공급선 확보, 해외자원 확보 방안 등 협의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5. 18. 수)

[환율]

	'20.12.31	'21.12.31	'22.4.30	'22.5.12	'22.5.13	'22.5.16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55.90	1,288.60	1,284.20	1,284.10	△0.01	5.22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56.20	1,289.60	1,283.90	1,284.40	0.04	5.08
₩/CNY	166.04	186.51	192.06	190.02	190.52	188.80	△0.90	2.32
₩/Y100	1,051.19	1,032.48	964.30	996.60	997.51	995.97	△0.15	△5.23
Y/U\$	103.34	115.14	130.24	129.30	128.74	128.93	0.15	11.02
U\$/EUR	1.2279	1.1318	1.0544	1.0504	1.0387	1.0405	0.17	△5.34
CNY/U\$	6.5305	6.3681	6.5975	6.7658	6.7993	6.7915	△0.11	2.78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5.16 (전일)	'22.5.17	22.5.17			
					전일(5.16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1.5일)	77.12	106.65	110.88	4.0	121.5	43.8	
철광석	87.27(11.18일)	120.75	127.35	130.15	2.2	49.1	7.8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2.2일)	9,692.00	9,270.00	9,396.00	1.4	21.2	△3.1
	알루미늄	1,951.50(1.19일)	2,806.00	2,791.00	2,836.00	1.6	45.3	1.1
	니켈	15,907.00(3.9일)	20,925.00	26,105.00	26,300.00	0.7	65.3	25.7

[반도체]

	'20	'21	'22.2	'22.3	'22.4	5.12	5.13	5.16	5월(~1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88	3.75	3.47	3.43	3.43	3.43	3.45
(%, YoY)	△21.9	8.0	△0.6	△11.00	△25.1	△24.6	△23.8	△23.1	△23.1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7.65	7.98	8.18	8.24	8.24	8.26	8.22
(%, YoY)	7.0	32.8	33.1	33.9	34.5	34.5	34.5	34.2	33.2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4.22	'22.4.29	'22.5.6	'22.5.13	22.5.13	
						전주(5.6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195.98	4177.30	4163.74	4147.83	△0.4	△17.8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3.31	'22.5.10	'22.5.11	'22.5.12	'22.5.13	22.5.13	
							전일(5.12비)	'21년말비
BDI	2217	2358	2939	3052	3117	3104	△0.4	40.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